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바람, 그리고 임종국(林鍾國)

동북아시아의 문제, 특히 일본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을 논할 때마다 내 머리에 떠올리는 분이 있다. 임종국(林鍾國, 1929~1989) 남이다. ‘친일문학론’의 저자이기도 한 그가 삶의 마지막까지 심한 폐기종(肺氣腫)에 시달리면서도, 민족의 운명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한 일제하 우리 지식인들 행태의 진실 찾기는 참으로 치열했다.

나는 생각이 깊은 주위 분들에게 이 책 ‘되짚어 읽기’를 권하곤 한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 민족의 정체를 알기 위한 탐구로 이만한 좋은 책이 있을까 싶어서이다. 이 책은 친일을 했던 특정 문학 예술인들을 가려내 고발하려고 의도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엮은 ‘한민족 백성문’ 같은 성격의 책이라고 나는 정의 내리고 있다.

나의 추천이라면, 일제 강점기에 극소수의 운동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침묵하거나 친일의 언저리에서 건들거렸다고, 연구결과로 그는 파악하게 되었던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친일인사라 분류된 대부분이 문필가들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친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글이나 여타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친일 행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필이나 그림 또는 약보와 같이 기록된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는 친일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몹쓸 친일행각을 저지른 자가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자는 느닷없이 애국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가능했을 것이다.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세상물정 어두웠던 열일곱 철부지 나이에 임종국은 해방을 맞는다. 온 나라 사람들이 해방이 무언지도 모르고 맞았는데, 그는 자신을 포함해 이 모든 우리를 가리켜 “천치(天癡)였다”고 탄식한다. 우리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었던 일제의 상황에 대해 증오의 날을 세운다. 무지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역사의 진실찾기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친일문학론’이 탄생한 것이다. 도서관과 연구실에 틀어박혀 문헌과 여러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진실찾기는 치열했으므로, 의도해 가면서 찾았던 사실도 많았지만, 이런저런 찾기 작업 사이에서 우연히 드러난 것도 많았다. 뒤지면 뒤질수록 척욕의 실상들이 낱낱이 자신 앞에 드러나자, 이 엄청난 사실이 놀라웠다. 이토록 깨달음이 없었던 이 민족의 처지가 말할 수 없이 개탄스러웠다. 이 같은 그의 심정을 ‘친일문학론’의 서문 ‘자화상’에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그 처절한 심경을 토로한 다음의 시(詩)는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있을 떨치는 / 저것이 바람인가 // 전신을 울리는 / 저것이 바람인가 // 모습을 잃어 / 소리로운 사는 것인가 // 바람이여 /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 바람이고 싶은 / 나는 무엇인가 // 바람이어야 하는 / 나는 또 무엇인가 // 모습을 벗고 / 소리마저 버리면 / 허(虛)는 마냥 실(實)인 것이니 // 바람이여 / 가서 오지 않음들 / 또 어떤가”

이 시를 읽으면서, 분단의 이 나라, 둘로 쪼개진 이 민족의 처지와,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분열돼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은 과연 어떤가에 이르면, 우리의 가슴은 심히 착잡해진다.

‘친일문학론’을 비롯한 임종국 남의 일제하 지식인들 행태의 진실 찾기 작업은 우리에게 큰 시사를 준다. 그제나 이제나 우리 지식인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냉철히 비교하여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와 기준을 주기 때문이다. 무릇 인간사에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행동의 양식이나 삶의 규범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게 금방 드러난다. 만약에 한 인격체이며 한 지식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터득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매우 심각해서 매우 나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일제하’와 ‘분단하’라는 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깨달음이 없는 지식인들의 사회라면, 우리 민족사에서 비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듯 깨달음이 없는 지경에서 해만다면, 안중근(安重根) 님은 일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일제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나라가 돈 쯤 벌었다 해서 대단한 부자 나라인 양 돈으로써 토대 삼아 아무 깨달음이나 소신이나 교양 없이, 역사의식 없이 거들먹거리다면, 어찌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친일문학론’과 같은 기록들을 오늘에 다시 읽고 지금의 현상에 비추어 담론하고 비교하고 문제를 타개하는 참고서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임종국의 시에서 ‘바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조용히 생각해 본다. 역사의 운명을 거느리는 어떤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찾는 조국의 명운을 말함일까. ‘한(韓)’의 정체인가. 이렇듯 처절하기도 한 통탄의 심정으로 우리 역사, 특히 우리 근현대사를 돌이켜 바라본다. 부끄럽게 그치없는 민족의 자화상을 하얗없이 들여다본다. <열화당 대표>

종교칼럼

내 간도 남의 간도 안 빼먹는 사회



방길튼 원불교 나주교당 교무

를 위해 너는 희생되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보통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토끼의 지혜를 찬양하고 거북이의 어려서움을 비웃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기저에는 인간의 지배욕이 깔려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야기에서 토끼는 오만하다. 달리기 시험에서 거북이에게 절대 질 수 없다는 오만이 깔려있다. 또한 거북이는 비겁했다. 토끼의 잠을 모른 채하며 지시받던 것이다. 이런 오만도 나쁘고 비겁함도 문제이다. 신영복 선생은 옥중에서 조카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 이런 오만과 지배욕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토끼는 선한 약자인가? 용공으로 잡혀간 토끼는 토끼의 간 보호를 위해 왕배탕(王背湯)을 요구한다. 배에 왕자가 있는 것은 바로 거북이이니 거북탕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 일로 토끼는 거북과 거래하여 벌주부의 아내를 취하게 된다. 판본에 따라 이 사건으로 벌주부의 아내는 토끼와 정분이 생겨 토끼가 육지로 가고난 뒤 상사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또한 이 일로 열녀문이 세워지며 벌주부는 부인의 죽음으로 죄책감으로 자결했다는 것이다.

고정된 사회적 약자는 없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약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리의 진실 일지도 모른다.

서로 간 빼먹는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챙겨서 유념하길 바라며, 서로 간 빼먹는 사회가 아니라 내 간도 남의 간도 안 빼먹는 사회, 토끼와 거북이가 자기의 장점을 인정받아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 지배 사회가 아니라 협력으로 풍요로운 사회하기를 희망한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박종민 선생은 공익심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상에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수행을 하라고 하시며, 착한 사람은 찬상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롭고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롭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공익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일러주고 계신다.

소태산 박종민 선생은 제자들과 간석자를 개간하는 공사 중 간석지 개척 허가 분쟁이 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 오직 공증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쓰라”고 하며 공익성을 강조하셨다.

국가와 민족 또는 이념과 조직에 종속된 개인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개인들에 바탕한 연대, 이것이 바로 공익사회의 비전이다.

광주는 광주학생운동과 5·18 민주항쟁의 성지로 자유와 평화의 땅이다. 북중하든 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강압과 억압의 지배체제의 사회에서, 남을 지배하지도 남에게 지배받지도 않는 사회(公衆)로 전진했던 것이다.

우리는 더욱 이 공익정신을 계승하여 각자가 자유로운 주인이면서 서로서로 손을 잡고 스크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상호협력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 나의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대! 이런 공익사회를 민주 광주가 선도해서 가꾸어가기를 희망한다.

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때 아니다



김대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료를 부과하는 점을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 원인은 부과체계가 26년 전 제도 설계 당시(1987년)의 방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년 11월이던 새로운 부과자료를 연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납기 마감일인 12월10일 현재 우리 지역 본부의 발생 민원 중 보험료 관련이 1만 5990건(2013년 11월 20일~12월 10일)이었다. 통계 되지 않은 실제 수치는 그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험료 관련 민원 유형은 ‘재산자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대상에서까지 제외’됐다고 항의하는 생계형에서부터 ‘이웃과 비슷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이 다니는 자녀 등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하고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제도 불공평을 피력하는 민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08년~2012년 보건복지부문 고충민원 처리현황’의 전체 8364건 중 건강보험이 23.4%인 1958건으로 여타 공공기관 등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국가기관

의 공식통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주는데, 보험료 관련 민원 및 자격변동 건수가 2011년 기준은 2억 2199만건에 이르고 방문 및 우선 민원이 6363만건으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공단은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과 국민적 수용성에 맞춰 새로운 부과체계 방안을 마련했다. 36년간에 걸친 현장 경험과 전문가·실무경험자·학계 등이 총 망라되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의 대표적인 3가지 방안은 ‘소득에만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소비에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인 주요 개혁 내용은 직장·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통합관리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사

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하여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능한가? 후자는 아직까지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12년 현재 우리 공단은 전체 가입자 2116만 세대 중 1686만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소득파악률 79.7%), 430만 세대(20.3%)는 소득 자료가 없다. 하지만, 국제형 등에서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퇴직·양도소득 등을 연계하면 공단의 소득 파악률은 95% 이상이 될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구시대의 보험료 부과체계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증하는 진료비를 조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건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 해법이 될 것이다.

社說

열악한 지방재정 ‘마른 수건’도 짜야 한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갈수록 줄고, 복지·육아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면서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860억원, 전남도는 577억 원의 세수가 줄었다. 지방세는 감소한 만큼 정부가 일정한 세수를 보전해 주지만 지자체의 큰 수입원인 취득세 감면은 일부만 보조해주고 있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 대상을 다시 조사하는 방법으로 15억6000만원을 추징했으며, 부도아파트의 취득세 44억 원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18억 6000만 원의 세수를 올렸다. 전남도는 세수 실적에 따라 일선 시·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벌여 급예만 149억

원의 세금을 찾아내거나 징수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세원 발굴과 세금추징은 재정 악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세수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 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세원을 찾는 데 노력이나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의 재정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숨어있는 세금을 찾는 것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줄이고, 사회복지비조차 주고 있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복지 및 육아비 부담을 안아야 한다. 지자체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평가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이면 정부나 지자체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현장 감의 횡포 단절할 법적 장치 마련을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감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금품과 술 접대 요구는 약과고 고급승용차에 아파트 중도금을 대납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리베이트를 챙긴 뒤 가짜 차용증을 요구하는 과립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더는 감이 음에게 군림하는 현상을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감이 막가파식 행패를 부리는 연결고리를 끊고 감을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광주지검은 지난 11일 공사 계약·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최모(49)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5곳 가운데 1곳은 도급 순위 10위 안에, 나머지 4곳은 100위 안에 드는 대형업체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봉보다 4배가 넘는 뒤편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톨샵통을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한 대형건설직원은 검찰수

사가 쫓겨오자 하도급 업체에 수년 만에 연락해 받은 돈을 빌린 돈다리가 강압적으로 차용증을 쓰게 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상납받은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은 ‘직원별 금액 배분 관련 서류’까지 만들어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기도 했다.

건설현장의 감을문화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또 그 특성상 구조적으로 쉽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부도 위기에 몰린 한 지역업체 사장의 하소연에서 시작했다. 한마디로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압박이 존재다. 오죽했으면 ‘을사(乙死) 조약’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왔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건설현장의 감을문화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우선은 공정거래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 국회, 건설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無 等 鼓

러시아의 대문화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백배나 존경하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완전한 깨끗함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아이들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거나 상처받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남지역 통계만 보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480건에서 지난해 553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10월말 현재 564건으로 벌써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신고 건수 가운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박학대 등학대로만 7명에 달했다.

얼마전 전남도가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에서 만난 의사, 아동보호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절반에 그친다고 입을 모았다.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다보니 논의의 집 앞에 관

여하기를 꺼리는 국민 정서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라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의사 등 22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8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한명도 없다.

울산경찰이 최근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를 12일 형사처벌한데 이어 신고의무자 7명에 대해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국내 최초 사례가 된다.

전남은 아동학대 환경에 취약한 조손 가정과 다문화가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전담지역 신고의무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신고전화를 불러서라는 이들도 많은데 이 참에 ‘1577-1391’이란 신고전화 스티커카드도 신고의무자들이 근무하는 책상에 붙이면 어떨까.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叔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12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